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제정이유서

2017. 2.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1. 목적	1
2. 정의	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4. 적용범위	6
5. 자금중개회사	7
5.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9
6. 보고 업무의 절차 및 방법	12
7.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공시	13
8. 거래 정보의 제공	15
9. 공시의 절차 및 방법	16
10. 이해상충방지기준	17
11. 콜거래 정보 및 콜금리의 공시	18
12. 적용범위	19
13.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및 해제	20
14. 지표금리 관리기관	22
15.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 조치	23
16. 관리대상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치	25
17. 단기금융거래의 위험관리	26
18. 자료의 제출 요구	28
19.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검사	29
20.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조치	30
21. 권한의 위탁	31

1. 목적 (안 제1조)

가. 제·개정 이유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규정

나. 제·개정 내용

- 단기금융시장의 거래 정보의 보고, 금리의 공시 및 지표금리의 관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기금융시장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
 - 규율체계가 미흡한 단기금융시장의 보고·공시 체계를 일관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향상
 - 지표금리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정의 (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단기금융거래와 지표금리 등 산재되어 있거나 미흡한 단기금융 시장과 관련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의

나. 제·개정 내용

- “단기금융거래”를 만기 1년 이내의 열거된 거래로 규정하여 예금 등 여타 거래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화 (안 제2조제1호)

현 행	제 정 안
◇ 단기금융거래 정의 ○ 없음	◇ 단기금융거래 정의 ○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환매조건부 매매, 양도성예금증서·기업어음증권·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매매 등 * 유동화증권을 포함

- 동법의 적용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 정의 (안 제2조제2호)

※ 법령상 적용되는 금융기관 등의 정의 비교

구분	단기금융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은행(은행법 인가)	○	○
금융투자업자	○	○
증권금융회사	○	X
종합금융회사	○	○
명의개서대행회사	○(예탁결제원)	X
보험회사	○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중앙회제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X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	○(겸영업자제외)
농협은행	○	○(시행령)
수협은행	○	○(시행령)
한국산업은행	시행령에 규율	○(시행령)
한국기업은행	시행령에 규율	○(시행령)
금융지주회사	시행령에 규율	○

○ 단기금융시장의 세부 거래유형을 정의 (안 제2조제3호~제7호)

현 행	제 정 안
◇ 콜 거래 (자본시장법시행령 §346②) ○ 90일 이내의 금융기관 등 간의 단기자금거래	◇ 콜 거래 ○ 금융회사 등 간에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은 자금의 차입·대여 거래
◇ 환매조건부매매 (자본시장법시행령 §81①, §85)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수)	◇ 환매조건부매매 ○ 동일
◇ 양도성예금증서 (정의없음) ○ 없음	◇ 양도성예금증서 ○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은행이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발행한 예금증서
◇ 기업어음증권 (자본시장법 §4 ③)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 ○ 동일
◇ 전자단기사채 (전단채법 §2) ○ 특정요건을 만족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채무증권	◇ 전자단기사채 ○ 동일

○ 단기금융거래 정보 등을 기초로 산출된 금리를 “단기금융시장 금리”로 정의 (안 제2조제8호제10호)

- 코리보, 단기코픽스 등 호가금리와 자금조달 비용은 별도로 정의

○ 특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금융계약 상의 채권·채무 가액의 결정, 금융상품 거래 가격의 산정 또는 성과의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를 “지표금리”로 정의 (안 제2조제11호)

※ 지표금리로 정의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 ❶ 공공 일반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해당 금리를 알 수 있을 것
- ❷ 전체 또는 일부분이 미리 정하여 공개된 방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산출
- ❸ 기초자산의 가치 또는 가격, 단기금융거래에서의 금리, 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금리 등을 기초로 산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동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
- 산재되어 있거나 미흡한 단기금융시장과 관련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단기금융시장 규율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

가. 제·개정 이유

- 여타 법률과의 상충될 경우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우선하여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여타 법령과의 상충될 경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자금중개회사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22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09.2.4 제정) 상 자금중개업 부분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사항이나 법체계상 부적합한 부분
- 이에 따라 자금중개업에 관한 규정을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금융회사 등 간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는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인가 조건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업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자금중개회사는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자금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하위규정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
 - 자금중개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의무, 회계처리,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함

- 자금중개회사가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는 하위 규정으로 정함
-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419조를 준용함
- 금융위는 자금중개회사의 본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기관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금중개회사 인가를 받지 않고 영위한 경우 등에 있어 형사벌에 처하며,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단기금융시장과 관련된 자금중개회사에 관한 규정을 본법으로 이관·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성·수용성 제고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 적용범위 (안 제7조)

가. 제·개정 이유

-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내용에는 개별기관의 거래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고대상이 되는 거래의 적용범위를 동 규정의 목적에 맞게 제한

나. 제·개정 내용

-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대상 거래를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 어느 일방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로 한정
 - ※ 거래당사자 어느 일방만 금융회사 등인 경우, 그 금융회사 거래내역중 거래 상대방 명은 익명으로 표기
- 또한, 국가의 단기금융거래를 통한 재정운용,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과정에서의 거래는 보고대상 단기금융거래에서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동 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안 제8조)

가. 제·개정 이유

- 감독당국은 개별 금융회사의 단기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정보에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여,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하는데 한계

-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일부 정보는 보고시기(매월)가 너무 늦고,

- 자금중개회사 및 예탁결제원이 파악하고 있는 개별 금융회사의 거래 정보는 법령 미비로 감독자료로 활용되지 못함

※ 금융실명법상(§4) 비밀보장 조항에 따라 세부내역을 관계당국에도 제공 불가

나. 제·개정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의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기금융거래별 특성에 맞는 거래정보 집중기관이 감독당국에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율

현 행	제 정 안
<p>◇ 콜 거래</p> <p>○ 자금중개회사가 매월의 중개업무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346④)</p>	<p>◇ 콜 거래</p> <p>○ 자금중개회사가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콜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당국에 보고</p>
<p>◇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p> <p>○ 자금중개회사가 매월의 중개업무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346④)</p> <p>○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은 거래 및 중개 내역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금투업규정 §5-24② 등)</p>	<p>◇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p> <p>○ 예탁결제원이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당국에 보고</p> <p>* 장내RP, 대고객RP는 제외</p>

◇ 장내 환매조건부매매 ○ 없음	◇ 장내 환매조건부매매 ○ <u>거래소가</u>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장내RP 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당국에 보고
◇ 기타 ○ 없음	◇ 기타 ○ <u>금융회사</u> 등은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를 통해 보고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 * 대고객RP는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단기 자금차입 및 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리스크 및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 불공정 거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대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은 단기금융거래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제논의를 거쳐 이와 관련한 정책권고안을 도출
 -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은 단기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거래정보 집중기관을 활용하여 RP거래 등 단기금융거래의 정보를 수집·모니터링할 것을 정책 권고

※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보고 관련 해외 규율 현황

지역	담당기관/근거법령	주요내용	추진경과
EU	·유럽증권감독기구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관한법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Regulation)	·보고주체 : 모든 금융기관, 일반기업 ·보고내용 : 증권 파이낸싱(Repo, 증권대차) 관련 모든 거래내역을 일별로 규제당국에 제출 (거래내역 취합은 거래정보저장소가 담당)	16.1월 입법완료 18.4월 은행부터 시작하여 적용 대상기관 확대 예정
	·ECB ·단기금융시장 통계 보고에 관한 법 (Money Market Statistical Reporting Regulation)	·보고주체 : 은행 ·보고내용 : 은행이 은행, 비은행, 일반기업, 정부 등과 체결한 담보부 거래, 무담보 거래 등의 내역을 일별로 ECB에 제출	16.7월 시행
영국	·영란은행(BOE) ·영란은행법(단기금융시장 통계수집 조항) (Sterling Money Market Data Collection)	·보고주체 : 은행, 대형 금융투자회사 ·보고내용 : 담보부거래 및 무담보거래 내역을 일별로 영란은행에 제출	16년 하반기 시행
미국	·뉴욕 연준 ·연준법(단기금융시장 거래 내역 보고)	·보고주체 : 은행 ·보고내용 : 예금, 유로달러, CD 거래내역을 일별로 연준에 제출	14.3월 시행
	·뉴욕 연준 ·Tri-party repo시장 개혁 T/F 권고 (Tri-party repo data collection)	·보고주체 : 청산은행(JPMC 등) ·보고내용 : Tri-party repo시장의 거래내역을 뉴욕연준에 제출	10.5월 시행
	·SEC, 금융조사국(OFR) ·양자간 Repo 시장의 거래내역 보고	·입법추진중	입법추진중

7. 보고 업무의 절차 및 방법 (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보고 정보에는 금융회사 등의 상세한 단기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엄격한 정보 보안·관리가 필요
- 아울러, 금융당국은 거래정보에 기초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므로 보고정보의 신뢰성이 중요

나. 제·개정 내용

-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기관은 보고 업무의 절차·방법, 보고 정보의 오류 통제 및 정정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마련
-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보고기관에 집중된 개별 금융회사 등의 거래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향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공시 (안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는 일부기관에서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금리산출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
- 공시주체·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고, 동일시장에 대해 2개 이상의 주체가 서로 다른 정보를 공시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이 단기금융시장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계

나. 제·개정 내용

- 단기금융거래별 특성에 맞는 거래정보 집중기관 등이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를 산출·공시

현 행	제 정 안
◇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 ○ <u>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협회가 전담채법, 금융투자업규정,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거래내역, 잔액, 금리 등 서로 다른 정보를 공시</u> * 금융투자업규정 §5-8③, 금융투자업규정 §5-57①제2호, 전담채법 §33 등	◇ 환매조건부매매(장외),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 ○ <u>예탁결제원이 단기금융시장 금리를 산출하고 그 금리와 거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u> ○ <u>금융투자협회가 단기금융거래에 관한 호가를 제출받아 최종호가 금리를 산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u>
◇ 장내 환매조건부매매 ○ 없음	◇ 장내 환매조건부매매 ○ <u>거래소가 장내RP 금리를 산출하고 그 금리와 거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u>
◇ 코리보, 단기 코픽스 ○ 전국은행연합회가 산출·공시 * 근거 법령 없음(운영위원회 등에 근거)	◇ 코리보, 단기 코픽스 ○ <u>전국은행연합회가 산출·공시</u>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공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출·공시 주체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규율
- 산출·공시되는 정보 및 금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 공시 내용에는 개별 금융회사등에 대한 정보는 제외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거래 정보의 제공 (안 제11조)

가. 제·개정 이유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업무(자본시장법 제286조)를 위해 장외채권 등 거래의 정보 관리 및 공시 업무(자본시장법시행령 제307조제2항제3호*)를 수행

* 채무증권의 장외매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예탁결제원으로 정보·금리의 산출·공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시장참가자의 정보 접근성 등 측면에서 금융투자협회에서도 동일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나. 제·개정 내용

- 예탁원은 금융투자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제공
 -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해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단기금융시장과 관련하여 동일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의 혼란을 방지
 - 금융투자협회에서도 단기금융시장 관련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시장 참가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공시의 절차 및 방법 (안 제12조)

가. 제·개정 이유

-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공시 업무와 관련한 기준 및 방법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

나. 제·개정 내용

- 단기금융거래 정보의 공시주체인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는 공시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공시 대상 금리·정보의 산출·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EU의 벤치마크 법에서도 벤치마크 금리 관리기관의 의무와 규제 당국의 감독기능을 규율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

11. 이해상충방지기준 (안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금리 산출·공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는 법 제10조에 따른 산출·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임직원, 정보제공기관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의무
-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공시기관 자율에 맡김으로써 부담 경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산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이 방지될 수 있으며, 산출·공시 업무와 관련한 시장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콜거래 정보 및 콜금리의 공시 (안 제14조)

가. 제·개정 이유

- 콜금리 및 콜거래 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콜거래 정보 및 콜금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며, 산출·공시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은행이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콜금리 및 콜거래 정보의 공시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적용범위 (안 제15조)

가. 제·개정 이유

- 제5장(관리대상 지표금리)는 법률상 요건을 만족하는 지표금리를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 조치, 금융회사 등의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 이 법에서 정의한 지표금리는 금융계약 등에 활용되는 금리로서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을 위해 결정하는 기준금리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관리대상 지표금리와 관련된 규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금리 및 콜금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리대상 지표금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EU 「벤치마크법」(서문 14)에서도 중앙은행이 산출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공시규정 제정·운영 등의 자율권을 부여

14.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및 해제 (안 제16조)

가. 제·개정 이유

- 지표금리는 경제적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율이 미흡하여 지표금리가 산출되지 않거나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
- 일부 호가금리의 경우, 호가제공자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나. 제·개정 내용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표금리를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음
-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 가능
 - ① 대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에 특정 규모 이상 사용되는 경우
 - ② 지표금리가 산출되지 않거나 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원활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대상 지표금리가 더이상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또는 해제 이전에 적정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이 경우, 필요시 금융회사 등,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거래소 등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경제적인 중요성이 매우 큰 지표금리를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해제 근거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규율체계의 안정성을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지표금리 관리기관 (안 제17조)

가. 제·개정 이유

- 관리대상 지표금리가 적절하게 산출·공시될 수 있도록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며, 법률상 의무를 부여

나. 제·개정 내용

- 금융위원회는 관리대상 지표금리를 지정하는 경우 지표금리 관리기관^{*}을 지정
 - 제12조(공시의 절차 및 방법) 및 제 13조(이해상충방지기준)는 지표금리 관리기관에도 준용

*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공시하고, 산출·공시 절차 및 방법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

-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해지시 그 지표금리의 관리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리대상 지표금리가 적절하게 산출·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EU 지표금리법에서도 규제당국의 승인 및 감독 대상이 되는 지표금리 관리기관을 지정하며, 해당 기관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내부감시 및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규율

16.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 조치 (안 제18조)

가. 제·개정 이유

- 지표금리가 적절하지 않게 산출되거나,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금융당국은 지표금리의 산출 및 공시 과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표금리 관리기관에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지표금리 관리기관·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으로서 금리의 산출·공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❶ 금리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일정기간(12개월 이내) 동안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
- ❷ 지표금리 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을 일정기간(12개월 이내) 동안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조치
- ❸ ❶, ❷의 기간을 12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조치
- ❹ 관리대상 지표금리 공시의 절차 및 방법 또는 이해상충방지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
- ❺ 그 밖에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한국은행은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표금리가 적절하지 않게 산출되거나,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여,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
- 호가금리와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 뿐만 아니라, 산출금리와 관련한 금융상품 발행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정합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EU 지표금리법에서도 ‘필수 벤치마크’와 관련하여 지표금리 관리 기관, 정보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무를 부과

17. 관리대상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치 (안 제19조)

가. 제·개정 이유

- 지표금리 산출이 중단될 경우, 금융회사 등이 그 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금융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규율체계가 미흡

나. 제·개정 내용

- 금융위원회는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 중단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그 지표금리에 연계된 금융계약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 중단에 대비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중단될 경우, 그 지표금리를 대체하여 사용할 대체금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 ② 대체금리를 새로운 금융계약에 반영하는 절차 및 방법
- ③ 대체금리를 기존의 금융계약에 반영하는 기준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지표금리의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도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EU 지표금리법(Article 28)에서는 벤치마크 금리를 활용하는 감독 대상 기관들은 벤치마크 금리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제공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율

18. 단기금융거래의 위험관리 (안 제20조)

가. 제·개정 이유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단기금융거래에서 파생된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금융회사 등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해야할 필요성
- 담보부 단기금융거래인 RP거래도 증권 등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무담보 신용거래에 비해 안정성이 높으나,
- 대외충격에 따른 증권가격 급락 등으로 마진콜, Fire sale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금융회사 등은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사항
 - ① 콜거래를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차입 및 자금대여 한도
 - ②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의 담보비율의 제한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금융회사 등이 단기금융거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의 담보비율과 관련하여 국내의 담보 비율 관행과 FSB의 관련 정책권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FSB는 미국·유럽의 RP 거래 관행이 은행 시스템 외부에서 과도한 신용팽창을 유발하여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 아래,
- 각 국에 대해 RP거래에서 최저 담보할인률(collateral haircut) 규제를 도입토록 정책권고를 제시('13.8, '14.9)
- 이러한 권고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haircut 수준은 1~2%대의 낮은 수준으로 거래상대방의 부도 우려 등 충격발생이 증권의 헐값 매각 등이 발생하여 증권가격이 폭락하고,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등 시장이 급격히 경색된 것에 유래
- 이러한 미국·유럽의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대의 할인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RP 시장 경색 등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이 경우, 최저 담보할인율 규제 설정시 기대하는 정책효과와 달리 할인율 자체가 최저 수준으로 수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시장참가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세부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라. 입법효과

-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레버리지 형성, 시장불안시 지급불이행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위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융시스템 리스크 등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통화·금융당국 간의 협력이 가능토록 규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9. 자료의 제출 요구 (안 제21조)

가. 제·개정 이유

- 동 법에서는 보고대상 단기금융거래를 한정하고 있어서, 입수대상 거래정보의 범위가 현 수준에 비해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 현재 한국은행은 자금중개사, 예탁결제원 및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부터 모든 만기 및 거래주체의 콜·RP·CD·CP·전단채 거래 정보를 수집(단, 현재는 인별 정보는 제외)

나. 제·개정 내용

- 금융당국은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단기금융거래 보고 정보 외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만기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금융회사 등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
- ※ 다만,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 거래당사자의 식별 정보는 제외하고 수집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필요시 만기 1년 초과 또는 양 거래 당사자가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검사 (안 제23조)

가. 제·개정 이유

- 자금중개회사 외에 동 법에서 부여된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검사 기능을 규율
- 다만, 동 법에서 부여된 업무가 영업활동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등 과도한 규제 부분은 제외

나. 제·개정 내용

- 자본시장법 제419조(제1항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의 검사 기능을 동 법에서 부여된 업무를 영위하는 다음 기관에 관하여 준용
-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거래소·전국은행연합회, 지표금리 관리기관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동법에 규정된 업무수행에 따른 금융당국의 검사 기능을 규율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지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조치 (안 제25~26조)

가. 제·개정 이유

- 동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검사 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에 준하여 규율
- 다만, 자금중개회사를 제외한 여타 기관에 대한 동 법에 따른 업무·의무 등이 자금중개회사와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조치 조항은 제외

※ 동법에서 자금중개회사에 대해서는 인가, 행위규제 등을 규율

나. 제·개정 내용

-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거래소·전국은행연합회, 지표금리 관리기관 등 동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제23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에 준용하여 조치
- 다만, 자금중개회사에 적용되는 일부 조치는 제외
- (제외되는 조치) 기관에 대한 업무인가의 취소, 업무의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동법에 규정된 업무수행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 기능을 규율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지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2. 권한의 위탁 (안 제27조)

가. 제·개정 이유

-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금융감독원에게 동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동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